

# 늘어나는 고령운전... 사고 대책 절실

### 광주·전남 5년새 26.6% 증가, 면허증 반납 248건 불과 전남 고령운전자 사망 사고는 전국 평균보다 223% 많아

일반 운전자에 비해 인지능력과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 사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즉각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11일 구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6분께 구례군 용방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74·여)씨가 불던 경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75·여)씨 등 2명이 숨졌고 A씨 등 3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은 같은 마을에 사는 70~80대 여성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도로 옆 1m 아래 도랑에 빠진 뒤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C(75)씨가 자택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중 맞은편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식당에 있던 2명이 유리창 파편에 맞는 등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C씨는 후진으로 주차하던 중 뒤 범퍼가 벽과 부딪히자 순간적으로 놀라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장성에서도 80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행인을 치는 사고가 있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985건에서 2015년 978건, 2016년 939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 2017년 1천35건, 2018년 1천27건으로 증가했다.



“안전한 산행 되게 해주세요”

전남은 2014년 1천393건, 2015년 1천547건, 2016년 1천588건, 2017년 1천780건, 지난해 1천884건으로 꾸준히 고령자 사고가 증가하면서 5년 새 35.2%나 늘었다.

광주보다 전남의 노인층이 많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자동차 1만대당 2.19명으로 전국 평균(0.98명)보다 2.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의 돌발상황 반응 시간은 비 고령운전자(0.7초)에 비해 두 배 느린 1.4

초인데다 차량 제동거리 역시 30~50대 운전자와 비교해 2배가량 더 길었다.

현재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하도록 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자는 전체 고령운전자 대비 미미한 수치다. 반납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줄이는 정책에서 나아가 교통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피고인 양승태’ 재판 누가 맡나

### 전례없는 사법부 수장 피고에 재판부 고심

‘사법 농단’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할지 주목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하고 배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에서는 전직 사법부 수장을 피고인석에 앉혀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어느 재판부가 심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법원은 원칙적으로 연고 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으로 사건을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 인사 이동과 사무분담이 예정된 재판부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이 배당된 뒤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맞춤형 재판부를 꾸리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4·35·36부 중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재판부 3곳을 증설한 바 있다.

신설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기존 재판부보다 사건 부담이 적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직접적인 연고 관계도 없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부 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부 34부(부장판사 송인관)는 정보회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 등 전·현직 법원 행정처 직원 5명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경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

# ‘압수수색 불발·임종헌 구속’ 法-檢 기싸움

### 사법농단 수사 8개월... 어떤 일들 있었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11일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락하게 됐다.

8개월여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대국민 발표, 법원-검찰 간 영장 신청 등은 결정적 장면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장 둘러싸고 검찰-법원 신경전 당시 검찰은 배당 하루 만에 법원행정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검찰이 요청했던 하드디스크 원본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공무상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좀처럼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간 책임자’ 임종헌 구속 수사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말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시에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이동식 저장장치) 2개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지난해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법 농단 의혹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간 책임자’ 역할에 대한 피의자 소환이었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임종헌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

◆‘사상 초유’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구속까지

검찰은 새해 들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결정, 통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 또한 검찰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법 농단 수사는 정점을 찍게 됐다.

검찰은 조사 끝에 사법농단 의혹이라는 반(反)헌법적 중범죄의 최고 책임자에게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

# 담양농협, 조합원에 3억원 상품권 지급 논란

### 선관위 본격 수사... 교육사업비로 3천명에 10만원씩 나눠 줘

3·13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담양농협에서 최근 조합원 3천여명에게 10만원짜리 농자재구입 상품권을 일괄 지급해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담양농협은 성과에 따른 조합원 배당이라고 홍보하며 상품권을 지급했지만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져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관련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1일 담양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지난해 농협 성과가 많아 배당을 준다는 명목으로 10만원짜리 상품권

을 받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니 남아 있던 교육지원사업비 2억9천여만원에 손익금 1천200만원 등 모두 3억500만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조합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담양농협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이사회에서 김 모 이사가 담당직원에 교육지원사업비가 얼마나 남아있는 지 물은 뒤 1억5천여만원이 남아 있다고 답하자 조합원에게 농자재 구입비로 5만원을 지급하자고 발의했는데, 이사회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 교육지원비가 2억9천여만원이 남아 있어 10만원을 지급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박 모 조합장이 마을별로 연초에 실시하는 보답대회에서 조합원들에게 2018년 성과에 따른 이익금 배분이라 말하고 상품권을 편지봉투에 담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진 뒤 조합원들 사이에서 말썽이 되자 담양농협 감사는 “정기총회 때 감사보고서 자료에 2018년도 손익금이 아니라 2018년도 예산 교육지원사업비

15억여원 중 사용하고 남은 2억9천여만원과 2018년 손익금 중 1천200만원을 합쳐서 조합원에게 농자재구입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모 조합장은 “작년 조합운영에서 거둔 성과에 따른 이익금이 당초 목표액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150%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조합원에게도 분배하자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며 “이번 상품권 지급은 지난해 손익금에서 조합원 3천여명에게 농자재구입용으로 지원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다수 지역농협에서는 조합결산 보고회 때 예산에서 보답대회용으로 소정의 선물(농산물 또는 생활용품) 외에 교육지원사업비로 별도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경대환기자 jih7808@srb.co.kr

**광주 최대 변화가! 최고 광고효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전광판 광고** (신세계안과 옥탑)

01 **광주 최고 유동인구 밀집지역**  
신세계백화점, U-Square, 광주종합버스터미널, e마트 등

02 **광주 최대 광폭대로에 위치**  
20차선 차량 정체 극심 지역, 57개 버스노선 경유지(광주 최대)

03 **무등일보, 뉴시스 뉴스와 생활정보 편성, 높은 주목도!**

04 **두 개 (무진대로, 죽봉대로) 광폭대로에 노출되는 광고효과 X2**

**1일 100회, 월 3,000회 노출!!** (20초 광고 기준)

▶ 스크린 크기: 13.6m x 7.7m    ▶ 해상도: LED풀컬러 국내 최고 화질  
▶ 하루 18시간, 20구좌 상영 광고 노출    ▶ 광고 노출 시점: 계약 즉시 가능

믿을 수 있는 그룹의 No.1 광고회사

**SRB** **SRB 애드** 문의 062) **510-4650**